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822
----------	------

제출연월일 : 2019. 2.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협의회 목적과 구성하는 자치단체를 표기함(안 제1조~제2조)
- 나.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로 하고,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4조)
- 다. 재원의 분담 등 협의사항, 정기회 등 회의 운영방법, 협의방법, 의견 청취, 규약내용 이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과 실무협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11조)
- 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과 회비, 분담금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2~16조)

3. 추진과정

- 2017.08.20. :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건의(국민인수위원회)
- 2018.05.27. :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 후보자 간 공동협약 체결
- 2018.11.16. : (행안부)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안) 제시
 -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송파구, 성남시 등 각 기관 의견수렴
- 2019.01.04. : (행안부) 행정협의회 (수정)규약 송부

4. 향후계획

- 2019. 02. : 의회 승인 및 고시[결과 통보(하남시→경기도)]
- 2019. 03. : 3월 중 정식협의회 구성·운영 예정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번영을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1부.
2. 관련 법령 1부.
3. 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 보고 자료 1부. 끝.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번영을 위하여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송파구
4. 경기도 성남시
5. 경기도 하남시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단위)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특별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5조(협의사항) 본 협의회에서는 위례신도시 관련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광역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4.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규약내용 이행) 본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규약을 체결한 기관은 본 규약서의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본 규약서의 내용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3. 본 규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0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요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2.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속 계속 중인 사항
3.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심의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취지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2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분담금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비 및 분담금) ① 협의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실비지원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5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 보고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번영을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함

1 동의안 제출 배경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시의회 동의 필요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2 행정협의회 개요

○ 배경 :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하남, 성남, 송파)에 걸쳐있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사항 다수 발생

○ 목적 :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위례신도시 공동 현안문제 대응*

※ 광역대중교통, 도서관, 폐기물, 축제·문화행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등

○ 행정협의회 조직

회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順(2년 단위)
위원	하남시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특별위원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LH 관계 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 소속 단체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 (회장) 호선으로 선출
-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회의의 규약)

4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번영을 위하여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3조(조직)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로 함
- 제4조(특별위원) 특별위원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
- 제5조(협회사항)
 1.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광역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4.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개최)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요구 시
- 제7조(협의방법) 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회장은 실무협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10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
-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

5 추진경과

- '17.08.20. : (국민인수위원회)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건의
- '17.11.02. :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행정1부시장, 경기도행정1부지사, 하남시장, 성남시장, 송파구청장, LH위례사업본부장 등
- '18.05.27. :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 후보자 간 공동협약 체결
- '18.11.16. : (행안부)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안) 제시
 -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송파구, 성남시 등 각 기관 의견수렴
- '19.01.04. : (행안부) 행정협의회 (수정)규약 송부

6 향후계획

- 2019. 02. : 의회 승인 및 고시[결과 통보(하남시→경기도)]